

제6장

고난과 갈등을 딛고 도약하는 포항

제철 시민사회와 산·관의 성장통

1. 포스코 사명 변경 갈등

1968년 4월 1일 창립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부응하고 해외에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1980년대에는 광양제철소 건설 사업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사명 변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주요 창업 1세대 임원들이 퇴진한 199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회사 측은 제철소가 포항과 광양으로 구분돼 있는 현실에서 광양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커 연말에 제작되는 회사 달력과 근무수첩에 포스코를 사용하고 1994년 3월 정기주총에서 동의를 받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10월 중순 포철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론화되자 포항향토청년회 등 사회단체들은 포철의 정체성과 지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펼쳤다.

1993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상공자원위의 포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갑작스런 사명 변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인 민자당 박재홍 의원은 사명 개정의 가장 큰 이유와 실익, 발상 경위를 따졌다. 또 사가까지 굳이 바꾸려는 의도를 묻고 포스코를 상대로 사명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휩싸인 포철은 결국 관련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후 각종 표기와 홍보에서 ‘포스코’를 대대적으로 확대 사용하게 된다. 이후 10여 년간 수면 아래에 머물던 사명 변경 논의는 2002년 들어 재개된다.

유상부 회장은 1월 24일 서울 증권협회에서 열린 상반기 CEO포럼에 참석해 포항 종합제철, 포항제철, 포철, 포스코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회사명을 포항종합제철주

식회사(Pohang Iron & Steel Co.,Ltd)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주식회사 포스코’로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의 일부 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해 포항항청은 2월 26일 ‘포항제철 사명 변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포철이 지금까지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사명을 유지해왔으나 다시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포항제철을 소중하게 지킨다는 취지 아래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3월 15일 정기주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명을 포스코로 변경해 10여 년에 걸친 사명 변경 갈등이 마무리됐다.

2. 시군 통합과 구청 폐지안 반복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기존의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포항시로 출범했다. 이로 인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조례 제10호로 남·북구청이 각각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청은 비자치구가 예산집행과 인사권에 독립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집행기관이란 특성 때문에 상당수의 민원이 본청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출발 당시부터 회의적인 지적이 있었다.

1996년 2월 구청 폐지안이 민선1기 박기환 시장에 의해 표명되면서 여론이 격돌하기 시작했다. 박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밝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구청 폐지의 취지문’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앞서 1월 25일 시정 홍보지인 ‘열린포항’ 통권5호를 통해 ‘1년간 구청을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우려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돌출, 행정의 비효율성, 비생산적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 구청 설치 전후 대비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94년 동기보다 약 200억원의 경직성 예산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여론을 탐색했다.

박 시장은 1년간 구청 운영 결과 전체 포항시 민원업무 처리 건수 중 구청은 11%에 불과하며 증명서 발급건수도 전체의 27%에 불과해 구청의 처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인구가 70만을 넘어설 때 구청을 신설해도 괜찮다고 전망하고 신항만 건설이 시작돼도 급격한 인구증가는 될 수 없으며 철강공단 입주 산업체가 추가 신설되더라도 자동화 등을 통해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 형태로 변화됨을 감안하면 인구증가가 연간 5천 명을 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포항시는 구청폐지 후 24과 88계 500여 명의 직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인력은 추진이 예정된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시정 발전을 위한 기획단, 테크노파크 건설, 상수도 사업부 등에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공무원들을 분산하면 4·5·6급 인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청 인력 중 7급 이하의 100여 명을 읍면동으로 이동시켜 조직을 활용하고자 했다.

구청폐지 발표 후 시와 시의회, 경북도의회 등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지역 분열 양상까지 보였다.

시의회는 당초 의원명의로 구청폐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구청 폐지에 가장 민감한 입장에 놓인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본청 과장의 90%는 폐지에 찬성한 반면 구청 과장의 90%는 반대했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60%가 찬성한 반면 구청 직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었다.

이후 4월 포항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이 문제를 심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위는 예산 절감면에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구청 당 경비 33억여 원에 비해 폐지 시 신설 부서 소요 경비가 30억여 원으로 산정돼 절감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포항에는 당시 50만9천500여 명이던 인구가 3·4공단 입주와 법원검찰의 설치, 테크노파크 조성, 위덕대와 한동대 학생수 증원, 신항만공사 착공 등으로 인해 향후 6·7년 안에 60만 이상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구청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이밖에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오일수)와 포항시 구청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등 사회단체도 구청 폐지는 성급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기환 시장은 ‘시장을 못하게 되더라도’라며 한때 정치 생명을 거는 듯한 강경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폐지안을 승인한데 이어 5~6월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였던 이 문제는 2006년 하반기 들어 집행부에 의해 계획이 철회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를 계기로 포항지역에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었다. 우선 집행부는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 없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와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에만 열을 올린 채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해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하게 미봉된 계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 당시 박 시장이 야당소속인 점이 왜곡되면서 부각돼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회의적 분석도 나왔다.

3. 한동대 사태

1988년 포항공대의 개교를 계기로 포항 지역사회는 더 개방되고 밀착된 종합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공학계 엘리트 외에는 입학문이 좁고 학문 분야가 제한적인 포항공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여론은 1990년 3월 포항지역사회연구소에 의해 ‘포항지역발전을 위한 4년제 대학 설립의 타당성과 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 발간된다. 이어 5월17일에는 고 김호길 포항공대 학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는 등 시민의 염원이 모아졌다.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인 유봉산업 송태헌 회장은 1991년 시민의 환경권을 희생해 얻은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 아래 포항4년제 대학 설립추진위원회와 대학설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현동학원을 설립, 총 740억원을 투입해 9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당시 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 김영길 교수를 초대총장으로 선임해 1995년 개교했으나 초대이사장 송씨는 1994년 5월 유봉산업의 매립장 붕괴사고의 여파로 재정이 어렵게 되자 개교 3개월 만인 6월 선린병원과 재단을 합병한 후 물러났다. 당시 송씨는 ‘대학설립 이념을 승계해 대학을 발전시켜 줄 것’을 전제로 선린재단 김종원 이사장을 제2대 현동학원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10월 송씨는 선린재단이 약속한 부채 80억원 승계와 학교운영비 100억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반환받아 정상화시킨 뒤 포항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한동대 재단이사회 결의나 교육부의 허가 없이 한동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운영의 파행과 설립이념의 변질이 지역의 우려를 낳기 시작했다. 앞서 대학설립이념의 핵심인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 김총장은 1994년부터 언론인터뷰를 통해 포항 30%, 대구경북 70%로 하고 기독교적 성격을 연세대와 같은 평범한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개교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일부 교수와 직원들은 김총장이 일반적인 기독교적 성격을 넘어 선교사 양성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종교 강요를 하고 있다며 설립이념의 변질에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지역도 동조했다. 결국 우려한 대로 온누리교회는 1996년 3월19일 재단인수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청년YMCA포항시연맹, 한동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수모임 등은 재단인수과정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중단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 4년제 대학 설립 운동을 벌였던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오일수), 향지회(최동하) 등 8개 사회단체도 인수 철회를 촉구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의 모임 등 5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포항의 4년제 대학’ 한동대가 ‘한동대 사태’라는 고유명사로 탈바꿈하는 국면이 펼쳐졌다.

이 시기를 즈음해 한동대와 김영길 총장을 둘러싼 고소고발과 법적 공방이 비롯된다. 2006년 2월27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은 한동대와 덕성여대 등 4개 사립대학 재단 측을 재단전입금 무단전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7월에는 설립자 송씨가 현동학원을 상대로 재단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송씨가 법인설립자금 9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유포해 송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해 8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과행으로 이어졌다. 새로 취임한 온누리교회 측 하용조 이사장은 1996년 이사장에 취임 하자마자 대학설립 주역인 사무처장 등 간부들을 재단전복 도모, 허위사실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교회 관계자들이 겸임케 하는 것으로 시작해 노동조합 및 일부 교수들로 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3월 18일에는 노조(위원장 주병창)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한동안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던 한동대 사태는 11월 16일 오전 3시께 노조 사무실에 20대 청년 10여 명이 복면을 한 채 침입해 잠자고 있던 노조원 2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이목을 받았다.

1997년 4월 11일 한동대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한정추)는 첫 공식활동으로서 포항 시민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설립된 한동대가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면서 철강공단 근로자들의 뜻에 반해 일방 취소한 야간부를 다시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동대가 특정 종교단체에서만 학교설명회를 갖고 학생을 선발해 2년 동안 지역출신 학생은 22명뿐이었다며 지역에 입학 기회를 더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8년 7월 28에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가 교직원들의 상여금과 임금 등 1억1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로 김총장을 불구속 입건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1999년 6월 23일 김총장은 이 혐의에 더해 이전의 송 설립자에 대한 명예훼손, 위증 혐의 등 모두 3건이 병합 심리돼 검찰로부터 “책임 회피, 장기간 불출석”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받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가운데 한 인사는 검사의 구형에 “잘했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5일을 명령받기도 했다. 6월 30일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정희)은 김총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01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동대 사태가 4년째를 맞으면서 지역사회단체와 대학의 갈등은 종교단체로도 번졌다. 1999년 3월 3일자 기독교신문은 한동대 졸업식 특집에서 포항시민들이 한동대로 물러가 보일러관을 부수고 전기와 수도공급을 끊기도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정추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정정보도와 사과성명을 요구했으며 결국 4월 14일 정정 및 사

과기사가 게재됐다. 포항시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한동대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한동대는 매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한정추가 전체 포항시민의 뜻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건학이념의 변질을 주장하는 한정추에는 기독교 대학을 말살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대도 “한정추가 김 총장의 벌금 300만원형을 놓고 부도덕성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총장의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파렴치범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7월 30일 한정추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포사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세한 가운데 한동대 우리대학 만들기 시민연대로 확대·개편해 이날부터 민주노총 등의 참여 속에 총장 사퇴 범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교육부는 11월 10일부터 한동대 이사장 및 총장의 대학 내 부정비리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1996년 9월 파면된 조광제 전 교수의 민원으로 비롯된 이 감사에 대해 시민연대는 기자회견과 한동대 앞 집회를 통해 무자격 교수 채용과 국고보조금 전용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감사팀은 포항시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정 감사 촉구에 감사기간을 3일 더 연장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12월 18일 감사 결과 제기한 21건의 민원 가운데 감독청 허가 없이 기채,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10건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법인과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2000년 1월 이를 공식 통보받은 한정추 등은 편파감사로 규정하고 일부 밝혀진 국고보조금 유용 등 형사적 비리에 대해 검찰 고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주임검사 김형곤)은 2000년 2월 포항지역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10월26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총장과 오성연 행정부총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1년 4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과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2001년 3월에는 ‘한동대를 사랑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포항지역 단체장’의 명의로 정장식 포항시장 등 선출직을 포함해 주로 기독교계 인사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1년 5월 11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충격이자 한동대 사태가 전국에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횡령과 교비를 전용하는 등 검찰측 기소 내용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동안 수차례 피고인들이 고의로 법정출석을 기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정추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학내 문제에 비판을 제기한 한동대생

에 대한 신상보호를 촉구했다. 지역의 들끓는 여론과 달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과 기고를 통해 김 총장 재판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논조를 내자 포항지역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지역과 중앙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한동대 학부모와 졸업생 및 재학생 대표, 기독교 신자 등 1천200여 명은 6월 4일 오후 포항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의 구명과 결백을 알리기 위한 궐기대회’를 가지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방이 포항 일대에서 한동안 전개됐다. 포항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중 관련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를 놓고 전체 의원간담회가 열려 양론이 팽팽히 맞선 끝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표명을 유보하기로 했다.

김총장 등은 7월 3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2003년 10월 17일 대구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비회계자금 600만원 횡령 부분은 무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4. 포항시 신청사 이전과 도심공동화

포항은 인구 51만에 면적 1,126km²의 외형적으로 큰 도시임에도 북구 덕수동 청사는 1958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이어서 행정의 비능률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이관석 경북도지사에게 대잠지역 공영개발계획이 보고된 후 1994년 포스코는 대잠지구가 신청사 이전부지로 선정될 경우 기대효과를 고려해 이곳에 신사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포스코는 이후 포항시가 대잠지구를 신청사 이전부지로 선정하면 포항시가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요청한 부지대금 선수금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포항시는 1995년 5월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1996년 12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국토개발원에 용역한 결과 기존 위치 및 중앙초교를 이용하는 방안, 대잠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청사부지 이용방안, 포항중 부지 이용방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잠지구가 적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의회와 협의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후 시의회는 청사 이전에 관한 정 시장의 의사 결정 요청을 받고 1998년 12월 18일 재석 32 중 찬성 23, 반대 8, 기권 1로 대잠지구 이전을 결의했다. 당시 반대에 나선 장광수 의원은 청사입지 타당성 검토기준 가운데 도로교통여건, 도시 기본구조

상의 부도심, 대중교통 이용여건, 도심과의 안정성 등에서 대잠지구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문하 의원은 청사입지 요건 가운데 남북구민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곳, 행정관청이 북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남북구 균형발전을 위해 남구 건립의 적합성, 차량흐름을 위한 도심 건축의 불합리성, 포스코 신사옥 건립과 연계할 수 있는 곳 등을 제시하며 대잠지구에 찬성했다.

결국 1998년 12월 29일 포항시 신청사는 대잠동의 현 부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1999년 1월 29일 포스코가 본사 신사옥 건립계획 백지화 공문을 접수하면서 포항시와 포스코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앞서 포스코는 1997년 9월 포항시장에게 대잠지구 신청사 건립계획의 통보를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1998년 12월 시의회의 결의 후에도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아 계획을 철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백지화 발표 후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고를 공식 요청하면서도 포스코 신사옥 건립 취소와 무관하게 포항시청 이전 계획에는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포스코는 당시 IMF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로 사옥 신축과 테크노파크 조성 등 여러 대형사업을 동시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포스코의 계획 변경 이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공해방지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포스코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시민권기대회, 경영진 퇴진 요구 등 강력 반발했다. 쏟아지는 비난여론에 2월 4일 포스코는 신사옥 백지화를 공식 철회하게 된다. 이후 포항시와 시의회, 포철 신사옥 건립 백지화반대 범시민대책위는 회사 사정을 고려해 1999년 8월5일 신사옥 백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포스코가 다른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게 된다. 이후 2004년 6월8일 신청사가 착공된 이후 12월에는 지원방식을 놓고 포항시와 포스코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한다. 포스코는 철강회사로서 철강 건자재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포항시는 200억원의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2000년 4월 발주된 신청사 학술용역이 7월 14일 보고된 결과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건물 배치 방향과 관련해 남서향은 전면에 저층건물이 있어 조망과 안정감, 쾌적성 측면에서 양호하며 진입도로에서의 정면성 확보와 조망에서 불리한 남동향 보다 적합해 채택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10월 포항시는 부지확장을 위해 양학공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에 요청했으나 자연공원 훼손을 이유로 불가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25일 부터 시의회 총무경제위원 10명, 전문위원 및 재무과장 등 6명이 대전과 밀양, 통영 등의 시청사 견학에 나섰다. 11월에는 학술용역결과보고 결과 다른 도시에 비해 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청사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의회는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후 장광수 의원을 제외하면 아파트 건축에 따른 조망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2004년 6월 청사 착공 후 뒤늦게 거센 반발 여론을 잉태하게 된다.

2002년 3월에는 시의회의 논란 속에 공사수행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다. 2003년 3월 일부 시의원들은 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인 포스코개발과 컨소시엄한 삼성물산이 아닌 현대건설을 선정하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는 인근 현대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또 6월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찰을 앞두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록 업체들 사이에서 무자격 업체 등록, 유력인사와의 친분설, 제출 서류 위조, 모업체의 전방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난무했다. 또 경쟁업체였던 삼성물산 측이 현대건설 측의 설계안이 포함시가 제한한 설계지침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와중에 설계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간부가 수천만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되고, 뇌물을 받은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물의가 빚어졌다. 이후 부적격업체라는 논란이 일고 입찰무효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 등으로 법원판결이 지연될수록 예산이 낭비되고 인근주민들의 착공압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결국 적격업자로 결정되게 된다.

2004년 6월 8일 신청사 건립 기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조망권과 관련하여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 시의원,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아그룹 명예회장, 언론 등에 의해 급부상했다. 요약하면 좌우와 전면이 완공됐거나 신축중인 고층아파트 등이 위치해 답답하고 영일만이나 동해 쪽이 아닌 경주 쪽이며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바라보이는 점 등이다. 따라서 신축중인 청사 옆 양학산을 절개해 윽기고 영일만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동남향으로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비용 면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10년간 추진한 행정신뢰가 추락될 수 있으며, 연쇄적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양학공원 일부를 부지로 이용하고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불가처분을 내려 변경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히 2년 4개월 후 준공예정인 신청사가 전면 백지화될 우려가 있어 시민숙원사업이 표류하게 되며 많은 예산을 들여 변경하더라도 진입도로와 부지방향 등이 맞지 않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변경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 시장은 재정비계획 당시 시 재정수입을 올린다는 의도에서 조망권 확보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시장은 종합적으로 어려운 재원 여건상 여러 가지 토지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잠지구 내 청사건립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청사 위치가 산위에 위압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위치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청사 앞에 많은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등 배려했기 때문에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망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포항시는 신청사 옆 고층건물에 대한 사업승인을 둘러싸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신청사 옆의 한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별다른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켜 형평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신청사와 가까운 아파트 동의 층수를 낮추는 방안으로 협의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

2006년 12월 25일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대 부지 6만4천231㎡(1만9천429평)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 포항시와 시의회 신청사가 준공됐다. 공사비 905억원과 부지조성비 등 2천여 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04년 2월 10일 착공해 2년 10개월여가 소요됐다.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구 청사에서 집기를 이전한 포항시는 민선4기 박승호 포항시장이 26일 오전 8시 50분께 대이동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해 신청사에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사 이전과 동시에 그동안 우려됐던 육거리 일대 도심공동화에 따른 상권 피해가 현실로 닥쳤다. 12월 28일까지 구 시청사 옆 가게와 식당 등 20여 곳이 ‘점포세’를 내걸었으며 일부 신문지국들은 26일 이전에 미리 구독료 수금을 마친 뒤 상당수가 폐업했다. 중앙상가 상인들도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시청까지 떠나스산한 도심을 외면해 영업난이 가중될 것을 호소했다. 포항시의 도심 활성화 방안도 불신을 받았다. 포항시는 2006년 정장식 시장 재임 시절 청사 이전에 대비해 건너편 중앙초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동북아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학부모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히자 철회하기도 했다. 박승호 시장은 주요 선거공약인 동빈내항 복원 사업이 도심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사업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육거리 시민회관 터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정해 소공연장과 문화전시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 2009년 착공했다. 이는 당초 소공원 조성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부족한 문화전시공간을 조성하면 여성과 청소년, 문화예술단체가 모이고 시청이 떠난 도심을 문화예술 인프라의 중심으로 확충해 도심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또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슬럼화가 심각한 서산터널과 포항역 인근 등을 2·3종 주거지로 변경해 사업과 주거시설의 고밀도화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 성시화 운동과 종교편향 갈등

2004년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져 나간 종교편향 갈등은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과 한국사회의 종교 간 갈등의 잠재된 폭발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 됐다.

2002년 5월 21일 포항 시그너스호텔에서는 정장식 시장, 공원식 포항시의회 의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급 기독교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기관장 홀리클럽 창립예배가 열렸다.

일부 참석자는 “많은 자원을 가진 포항이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될 때 미움, 갈등, 싸움, 부정, 범죄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포항실내체육관 등에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마친 뒤 포항지역에는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은 정장식 포항시장이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성시화운동의 사업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52억여원) 1%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거나 기획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해 10월 11일 포항시 불교도협의회 소속 신도 21명은 포항시를 방문해 항의하며 정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0월 27일에는 지역의 종교편향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 아래 종교편향대책위원회(종편위)가 발족됐으며 11월 1일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편위, 동국대 석림회, 불교인권위 소속 스님 등 20여 명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시장의 공식사과와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종편위는 정 시장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11월 6일 사찰 입구에 기독교계 선출직 인사들의 실명이 걸린 현수막을 내걸고 사찰 출입을 거부했다. 16일 종편위는 또다시 정 시장과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자 11월 25일 운흥사에 사무실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종편위는 12월 1일 소식지를 발행하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시장의 언행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헌법 20조 위반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정 시장은 각종 행사 석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종교에 치우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도 홀리클럽은 탈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종편위는 그동안 요구해온 사과는 탈퇴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공식사과도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시장은 또 “클럽 회원으로 참석해 성경공부를 한 것뿐인데도 탈퇴하라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극히 사적인 신앙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식 시장은 또 성시화대회 명예대회장직은 시장으로서 이름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시의 재정 1% 지원 기획안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실무진이 마련한 것으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종편위는 선출직 공인이라면 통상적인 축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잘못이며 기획안이 대회기간과 이후 인터넷에 게시되고 평신도에게 모두 배포됐

음에도 명예준비대회장이던 시장이 실무진의 실수라고 우기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종편위는 12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5일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를 포항시종합운동장과 포항시청에서 개최한다. 시장직 사퇴 요구에까지 이른 이날 행사는 스님 600여 명(비구니 310여명), 영남권 불자 등 2만여명(경찰 추산 1만6천명)이 참가했으며 오후 1시 30분께 종합운동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 가운데 5천여 명(경찰 추산 3천명)은 버스 150여 대를 이용해 포항시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메운 채 목탁을 두드리며 시청 둘레를 행진했으며 일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청마당에 진입, 관계자들을 긴장 시키기도 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곧 돌아갔다. 이어 3시 50분께 경찰의 중재로 경천스님 등 대표들이 황성길 부시장을 정문 앞에서 대면한 가운데 “정 시장이 직접 불자들 앞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뒤 다시 분위기가 격앙돼 재진입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규백 포항북부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참가자들을 설득하고 경천스님 등 지도부도 나선 끝에 4시 40분께 산회가 합창을 마지막으로 6시간여에 걸친 이날 시위가 끝났지만 2차 집회와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장 사퇴 때까지 반대운동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항 남·북부서는 앞서 대구와 울산에 지원을 요청, 직원 300여 명과 10개 중대 1천여 명을 배치했다.

이후 기관장 훌리클럽은 16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 24명 중 18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 갈등을 우려해 해체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16일 황성길 포항부시장으로부터 전화로 이를 통보받은 종편위는 정 시장이 타인을 시켜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고 퇴진운동의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12월 20일 정시장과 종편위 측이 시청 기자실에서 만나 화해의 악수를 나눴으며 포항 기독교계가 보여준 성의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하며 사과를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5년 3월25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정시장이 천주교 신부들과 참석하는 등 화해의 자리가 마련됐으나 후유증은 이어졌다. 천주교·불교성직자 지도자모임 등은 2006년 3월 9일 포항의 주요 일간지에 이상득 국회의원을 성토했다는 성명을 게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2005년 10월 27일 회합을 가진 자리에서 5.31지방선거에서 종교편향 인사를 후보공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실현할 것을 약속했지만 2006년 2월 24일 또 다시 가진 모임에서 말을 바꾸었다며 비난했다. 천주교·불교 성직자 모임은 이후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남구 지구당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6. 포항건설노조 사태

1989년 설립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포항지역건설노조는 2006년 파업 당시 구속된 이지경 위원장 등 소장파로 분류됐던 40대 안팎의 노조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전국 조합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으로 분류돼 왔다. 이 위원장은 이미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구속, 불구속을 되풀이 한 경험으로 입·단협 교섭과 별도로 공사 발주사인 포스코를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전국에 쟁점화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갔다.

포스코건설 등 원청사의 하도급업체들이 결성한 전문건설협회와 포항건설노조는 2006년 4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 벌인 노사 상견례와 1~15차 교섭이 결렬되자 6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6월 27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6.47%로 찬성이 가결됐다. 29일 경북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6월 30일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해 7월 1일부터 포스코 출근 저지 집회에 이어 2천500여 명이 6일과 7일 포스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7월 13일 오후 노조원 2천여 명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전격 점거함으로써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포스코 지역협력 담당 부서의 서류들을 입수해 노동계와 비판성향의 언론에 넘겨줌으로써 경찰과 포항시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활동 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은 14일 노조 지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15일 오전 5시에 경력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 3층까지 장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7월 16일 오후 2시 형산로터리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노동탄압 규탄대회’ 당시 양측이 격돌하는 와중에서 조합원 하중근씨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면서 돌발변수를 맞게 된다.

하지만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등 포항경제 위기론이 확산됐다. 포항상의회와 포항향청 등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은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16일과 18일 ‘포항경제살리기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포항시 사상 전례 없는 공조 체계를 과시한다. 이에 맞서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여성회 등 건설노조 파업에 동조해온 시민단체들은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 언론에 공정 보도를 촉구하며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 예상치 못한 규모의 시민궐기대회에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민주노동당과 포항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7월 19일 ‘영남권 노동자 총대회’를 개최한다.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종합운동장과 형산로터리 일대에는 경찰과 노동계, 포항시민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장기간 파업에 따른 지도력 및 결속력 약화, 포스코 본사 단전

및 단수 조치 등 압박이 가속화되자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져오던 노조원 이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7월 21일 오전 5시부터 경찰의 통제 속에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나오면서 점거사태는 종료되고 이지경 노조위원장 등 100여 명이 체포된 데 이어 24일에는 검찰이 노조 주동자 58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발부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25일 노사 양측의 협상이 재개되면서 실마리가 보였던 파업사태는 또 다른 악재들로 인해 그해 포항의 여름을 달궂어 놓았다. 8월 1일 하중근씨가 결국 사망했으며 4일과 9일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노조원 250여명이 부상하며 양측의 피해가 늘어갔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11일 2차 협상이 재개돼 12일 오전 5시 타결 속보가 나왔지만 노조 투쟁본부가 노조 협상대표단이 잠정합의한 임단협 안의 수용을 거부해 실망을 낳았다. 시민 측 128개 단체 3만여 명과 노동계 측은 각각 18일과 19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타결이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포스코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강경책을 내놓았고 노동계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져 갔다.

8월 25일 노조 지도부에게 16억3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30일에는 파이넥스 PCI 공사의 시공사를 포스코건설에서 서희건설로 변경했다. 9월 1일 건설노조원 200여 명이 공사현장에 복귀하고 경영난을 호소하던 전문건설업체 2곳이 포스코건설에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4일 노조원 300여 명이 추가로 출근해 서희건설은 PCI 공사를 착공했다. 6일 유족 요구로 하중근씨 장례식이 열린 뒤 8일 노사 물밑협상이 재개되면서 11일 기계·전기분야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이르렀다. 하지만 13일 찬반투표 결과 노조원의 64.5%가 합의안을 반대했고 17일 합의한 전기·기계분회 2차 잠정안도 18일 2차 조합원투표에서 토목·목공분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론이 반노조 정서로 급격히 기우는 가운데 19일 토목·목공분회가 잠정합의안에 이르렀으며 20일 3차 찬반투표에서 67.6%가 찬성함으로써 장장 82일 간의 파업사태가 종결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저가 발주와 근로조건 악화 등 국내 건설업계 구조적 악순환의 첫 단추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포스코 점거 사태를 계기로 언론방송을 통해 집중 부각되자 시공참여제 폐지 입법예고안을 서둘러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포스코 본사 점거 해산 이후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협의회 의장, 민노총 부위원장, 건설연맹 사무처장 등 지도부 67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또 16억3천만원 손배소송은 1심에서 10억8천700여 만원 지급 판결에 이어 2009년 2심 재판부의 5억원 화해권고를 포스코가 받아들임으로써 재산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포항건설노조 김진배 위원장은 파업 종결 2개월여 뒤인 2006년 11월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민과 포스코에 공식 사과했다.

건설노조가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해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은 포스코는 파업 사태로 매출기회 손실 등 직간접 피해액이 하루 46억원씩, 모두 3천500여 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당초 2006년 12월 준공 목표였던 최첨단 신기술 파이넥스 설비는 전 세계 경쟁사가 상용화 성사 여부에 대한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기술력 하자가 아닌 건설 파업으로 인해 준공 기간이 연장된 사태가 국제적 투자 불안요인으로 우려됐다. 또 한국 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민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경찰의 허술한 초기대응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본사를 8일 동안이나 불법 점거당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문건이 유출돼 경·언·관 유착기업으로 매도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적잖게 훼손됐다. 그러나 포스코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3년의 화물연대 파업 때와 달리 건설 노사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주체가 아님을 관철시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주변의 예상을 따돌렸다.

특히 지난 2003년 포스코 정문 앞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에 의해 등 떠밀리듯이 협상테이블에 나서 노조 측 요구대로 운송단가를 인상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발주공사의 원청사인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100여 업체가 조직한 포항전문건설기계협의회와 포항전문건설전기협의회는 파업 과정에서 포스코, 포스코건설, 건설노조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처지임을 줄곧 호소해 왔다. ‘IMF’사태 이후 본격화된 포스코의 경영 합리화 기조에 따른 저가 발주에 대해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경영 수지를 맞춰온 이들 업체들은 당시 파업에 의한 600여 억원의 매출손실을 주장했다. 이 와중에서 자금난 끝에 3개 업체가 포스코건설 공사 계약 포기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포스코도 파이넥스 PCI설비 시공 원청사를 포스코건설에서 서희건설로 변경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당시 사태를 계기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독점적 공사 수주 체계에 경쟁 원리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 고용구조가 불안하고 자본력이 약한 부실업체의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도 파업 해결을 어렵게 만든, 7월 13일 포스코 점거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허약한 정보력과 위기 대응력에서 확인됐듯이 당시 참여했던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여파와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공조체계의 불협화음이 극명히 드러났다.

파업 사태의 와중에서 포스코의 마그네슘강관 공장이 전남 순천에 유치된 사례는 당시 막 출범한 박승호 시장 체제가 맞닥뜨린 포항 위기론의 실상을 상징했다. 전 경제계에 82일간 파업도시 포항의 이미지가 노사 불안정 등 기업 투자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각인될 경우 현대중공업 2단계 확장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민심 양극화도 심각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에 반발한 포항상의 등 기업 및 기관 단체가 중심이 돼 열린 3차례의 대규모 규탄대회와 노동계 집회, 친 노동성향의 시민 단체들이 중재에 나섰다지만 언론 견제기능 외에는 시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해 허약한 조정기능을 드러내고 인터넷을 통해 쏟아진 상호비방은 도시 전체의 화합에 상당한 균열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포항지역에는 2006년 10월을 전후 해 지속적으로 상생과 화합의 신노사문화 정착시키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2007년 3월 23일 오후 포항축구전용구장에서 는 ‘포항제철소 한가족노사화합 선포식’이 열려 포스코 임직원,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운송 및 하역회사, 전문건설사 등 150여 업체 노사 2천500여 명이 노사 영구평화를 선포했다. 앞서 1월 29일에는 지역 노사대표와 포항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노사정협의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등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해 ‘노사정 산업평화 공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2007년 3월까지 포항에서 13개 업체가 무파업 영구 노사평화를 선언하는 등 포스코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등을 중심으로 노사 상생의 산업평화 무드가 확산됐다.

이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포항건설노조)는 2009년에는 10여 차례 가진 임금협상에서 임금 7% 인상과 노조간부 채용 등을 요구해 임금 1.5% 인상을 고수한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면서 7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15일 협상에서 임금 2.8%(3천원) 인상안에 합의하고 노조 집행부 현장출입과 우선채용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17일 파업을 철회하고 건설현장에 복귀했다.

7. 한국은행 포항본부 존치 운동

지난 2006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지속된 한국은행 포항본부 존치 운동은 그해 82 일간에 걸쳐 포항에 파란을 몰고 온 건설노조 사태 이후 확산된 포항경제 위기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민·관·산의 총체적 합작품이었다.

2006년 5월 감사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지역본부 및 3개 지점 가운데 일부 방만한 운영이 지적됨에 따라 경북 구미 등 3개 지점을 폐쇄하고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한 후 2010년까지 폐쇄하는 방안이 7월 중으로 한국은행에 공식 통보할 예정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이를 받아 들여 중장기 발전 전략에 포함시키는 한편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포항본부는 이미 1997년 내부 구조조정으로 일부 과가 폐지됐고 직원도 대폭 감축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포항상공회의소, 경주상공회의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은 5월 16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재정경제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상득·이병석·정종복·김광원 국회의원에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능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포항본부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부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올 상반기 지역경제를 위한 자금지원액이 293건 529억원에 이를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 때문에 포항본부가 폐쇄될 경우 동해 연안권을 미래성장 동력산업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되고 C2(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자금)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 자금난도 우려했다. 이밖에 경북 동부권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금 수급에 대한 차질과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업무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북도내 기관·단체들이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구미지점 폐쇄 추진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상북도의 연구기관, 상공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 도내 기관·단체장들은 8월 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포항본부·구미지점 폐쇄 저지를 위해 경북도의 회 의장, 구미와 경주 상공회의소회장, 포항 YWCA회장 등 7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상천 도의회 의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월 4일 “지역본부 및 지점 축소·폐쇄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최종결정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일단 규모를 축소했다가 몇 년 지난 후 다시 검토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곧 대구경북연구원은 8월 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구미지점 폐쇄 시 지역경제영향과 대책’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춘근 대경연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에 실물경제에 비례하는 지방본부 기능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지방화시대에 서울 본점 조직 중 비효율적인 조직을 감축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호시장,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이대공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등 포항시 대표단 5명은 9월 22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경북도의회가 8월 말 본회의에서 결의한 존치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어 이병석 국회의원과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등과 포항과 구미시민 400여명은 9월 26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경제 외면하는 한국은행 규탄한다’는 등의 현수막 20여 장을 내걸고 상경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 앞에서 두 지역 본부 및 지점 존치의 당위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성태 총재 면담을 요청하며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결국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한은은 이승일 부총재가 원정시위대 앞에 직접 나와

“기존의 방침과 달리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한은이 이후 구체적인 후속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자체장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한은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3일 한은본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시장은 ‘한국은행 포항본부 사수,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 방침 철회하라. 목표는 승격, 포항은 폐쇄, 지역차별 왜말인가? 경북경제 죽여 놓고 한국은행만 살려하나? 포항시장 박승호’ 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보도돼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열린 한은 국감장에서 이성태 총재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포항본부 폐쇄방침의 진위 여부를 묻자 “경영혁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 일부 점포의 폐쇄문제가 거론됐지만 최종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12월 27일 한국은행은 2007년 3월 1일자로 포항본부는 유지하고 대구경북본부 구미지점, 광주전남본부 순천지점, 경남본부 진주지점 등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한은 포항본부 존치결정에 대해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배경훈 한은 포항본부장을 방문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포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5월 한은 포항본부의 폐쇄론이 처음 발표된 이후 7월 민선 제4기 시장에 취임한 박 시장은 건설노조의 파업사태의 와중에서도 한은 본부를 지켜낸 것으로 평가됐다. 포항시는 2007년 2월 포항본부 존치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경제과 한일도(6급)· 조부국(7급)씨 등 유공공무원 2명을 포상하기도 했다.

8. 포스코 40주년 기념 명명

포항시는 2008년 4월 1일의 포스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12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POSCO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2008년 2월에는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위원 14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에는 형산로터리-오광장-양학터널-제철고 간 오도로와 신형산대교명을 ‘포스코로’와 ‘포스코대교’로 명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 이에 앞서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2천300명의 응답자 중 포스코로는 70%, 포스

코대교는 71%, 청암광장은 60%가 각각 찬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의 일부 인사와 언론 등이 신문 칼럼 등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항과 국가 발전에 막대한 공을 세운 포스코 창립 40주년의 각별한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조사결과에 의지해 공공인프라를 개명하는데 대해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3월 18일부터 1주일 동안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청암광장’으로의 개명에 대해 3월 20일에는 찬성 39%, 반대 61%이던 결과가 21일 오후 3시께 58% : 42%로 역전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이해관계 측의 조직적 개입을 통한 여론 조작이라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항시가 포스코의 자본력에 저자세로 일관해 시민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강한 반발도 나왔다. 이는 2008년 4월 4일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만나 포항시의 포스코에 대한 여러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포항시가 추진해온 해도수변공원 조성에 필요한 3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한 일을 염두에 둔 지적이었다.

또 박태준 명예회장의 호를 딴 청암광장의 경우 이미 포항공단 안에 청암로가 있으므로 광장 명칭에 까지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기도 부천시가 고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의 이름을 따 유일한로로, 경기도 파주시가 LG필립스 LCD 공장 유치를 기념해 LG로로 명명한 사례를 들며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홍보하는 취지에서 포항시의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찬성 여론층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반영됐을 뿐 신문기고 등 적극적인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오도도로와 신형산대교명은 각각 포스코로와 포스코대교로 명명키로 하고 청암광장 명명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오광장 일대는 지식경제부에 의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포항상징거리 조성 가로 경관 디자인 개발사업’과 병행해 별도의 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후 청암광장 명명은 또 다시 시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POSCO대교 명명식은 2008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형산로타리 협력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당시 사장이던 정준양 포스코 회장, 이병석 국회의원,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9. 경북도청 유치 운동

경북도청은 1981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승격 및 독립으로 산격동 청사에서 경북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여러 선거 마다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도의회의 합의 실패와 지역 간 갈등으로 표류했다. 하지만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는 민선 도지사 후보들이 도청 이전을 반드시 공약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을 맞게 했다.

변화된 국면 속에서 도의회는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1992. 7. 13), 도청이전 기획단설치조례 제정(1992. 12. 10),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 용역 의뢰(1994. 3. 29), 이전 후보지 3곳(안동, 구미, 포항) 선정 등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이어 1995년 3월 10일에는 후보지선정 용역보고서에 대해 도의회의 불신결의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3곳(영천, 경주, 의성)을 추가해 후보지로 6곳을 다시 선정(1995. 3.29)하면서 이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경북의 30년 숙원과제가 해결 기미를 맞는 듯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심각하자 도의회는 같은 해 5월3일 후보지 선정을 위한 표결도 못한 채 이를 집행부에 넘겼다. 경북도도 1997년 6월 민간인 50명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다시 최적의 후보지를 논의해 선정하기로 결정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도청 이전은 다시 표류하게 됐다.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이전 여론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전기는 1999년 전남이 도청을 옮기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다시 찾아왔다. 시·군의 이전 목소리가 거세지자 도는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식 기구를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재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는 12월 시·도 통합론이 제기되고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도청 이전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 위원회 설치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논의조차 중단되고 말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전 문제는 2005년 2월 충남도 도청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쟁점화한데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급부상했다. 민선4기 김관용 도지사는 2006년 12월 조례안을 마련했고 도의회도 2007년 2월 이를 의결했으며 4월에는 도청 이전 심의·의결 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07년 5월에는 23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해 국토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과 용역을 계약했으며 2008년 2월 22일 후보지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이미 1995년 용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안동 등 북부권이 균형발전론까지 더해 도청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여러 주체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속에 출발했다. 포항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는 3월 14일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치 당위성 등에 관한 회의를 연 뒤 31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청유치상황보고회를 열었다. 김병관 포항노인회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등 50여 명의 주요 사회단체장들은 ‘포항의 도청유치에 사회단체가 앞장서 전 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며 의견을 모았다.

각 지자체들의 첨예한 유치 경쟁이 격돌한 핵심쟁점은 이전추진위가 2월 22일과 4월 18일 각각 확정한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이었다. 추진위는 먼저 입지기준과 관련, 1월 28일 영주에서 열린 북부권 설명회에서 ‘면적 15km² 이상, 계획 인구 15만명 이상’의 규모를 제시했다. 이에 북부권은 산지가 많은 특성 상 추진위의 입지기준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는 만큼 북부권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후 추진위는 ‘면적 12km² 이상, 20년 후 계획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로 기준을 완화해 확정했다. 결국 완화된 입지기준이 적격 부지를 가릴 변별력이 약해지자 평가기준이 지자체들의 승부처로 부상했다.

안동시는 1995년 2월 최적지로 평가됐던 연구용역 결과를 내세우면서 충남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따른 확정 사례를 들며 균형성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은 경북 유일의 항만과 연구 인프라, 도청 이전 비용 최소화 이점 등 성장성으로 맞섰으나 입지가 좁혀져 가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위기감도 커져 갔다.

4월14~15일 평가기준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가 칠곡과 영덕에서 예정된 가운데 10일 평가기준안이 균형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남권이 즉각 반발했다. 포항유치위는 4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이전은 경북도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21세기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국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한 짜맞추기식 기준으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중심성’에 대해 “지리적, 인구적 중심성만을 거론하고 있는데 향후 경북도의 장래를 위해 ‘산업중심성’도 포함돼야 한다”며 경제성 부분도 “도시인프라 구축과 비용 항목을 추가해 배후도시의 교육·산업·사회문화서비스 등 도시인프라 공유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치위는 또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건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반대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급기야 포항시지역혁신협의회는 4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포항시로부터 도청이전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경북도에 대한 강도 높

은 비판과 함께 포항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참석 위원들이 도청 이전 평가기준안에 정치적인 의구심이 깊다면서 아예 유치 신청을 하지 말고 범시민 저항운동으로 나가자는 등 예상을 뛰어 넘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자 양용주 의장이 서둘러 회의를 마치기에 이르렀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포항시는 5월 15일 후보지 접수 마감을 앞두고 북구 신광면 만석리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가 전체 토지 면적이 13.8km²로 기준치인 12km²를 넘고 개발가능지 면적 역시 11.7km²로 기준인 7km²를 상회한다고 제출한 포항시의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4월 25일 이를 통과시켰다. 포항시가 제시한 도청 유치 당위성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구와 산업의 비중이 높고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 △포스코, 포스텍 등 배후지역의 집적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글로벌화를 위한 항만, 공항, 철도 등 국제적 교통망 등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북도가 확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될 경우 탈락의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동남권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들은 4월 3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청 이전 선정기준은 도민 전체에 도청 이용 불편과 경제적 비용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얕은 정치적 의도와 주관적인 평가 및 배점 기준과 연관된 만큼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배점 기준 선정 경위를 공개하는 등 동남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경북도가 TV토론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도청 이전 저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임”을 재천명했다.

반면 북부권은 후보지 접수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처가 지역별 후보지 통합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충실하듯 목표를 향해 적극적 행보를 거듭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접수 마감을 이틀 앞둔 5월 13일 접경지인 안동시 풍천면을 연합 후보지로 전격 합의하고 현지에서 협약식을 개최해 도청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반면 포항과 영천을 제외하면 역내 지자체들의 도청 유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동남권은 15일 이전 단일화가 무산된 뒤 끝내 합의카드를 찾지 못했다. 포항시는 15일 박승호 시장, 박문하 시의회의장, 양용주 포항시 도청유치추진위원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형 포항향토청년회장 등이 경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막판에 이른 도청 이전 경쟁의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자 6월 2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열린 도청현안 설명회에 참석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도청 이전 결정에 승복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포항 등 일부 지자체 대표들은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는 ‘도지사 개입설 및 후보지 내정설’, ‘무원칙적인 심의위원

지역 안배 고려' 등 각종 논란과 무관치 않았다. 6월 5일 포항에서 시작된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의 현장설명회는 경호업체 직원들의 삼엄한 통제 속에 취재진들의 접근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진행됐다. 실사단은 운용섭 포항부시장의 15분여에 걸친 설명이 끝나자 미리 정해진 질의답변 순서에 '없다'고 일축한 뒤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경북도 실무진은 취재진의 접근 불허 및 위반 시 평가감점 방침의 근거로 각 지자체에 보낸 '현장설명 시 위반사항 조치계획'을 제시했으나 확인 결과 이와 무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추진위는 6월 8일 오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유치신청지역 11곳에 대해 균형성과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해 발표했다.

포항, 경주, 영천이 결성한 경북동남권혁신협의회는 10일 오후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발표문을 통해 “마라톤회의 결과 이번 발표는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이 명백해 보다 적극적인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의 불공정성 규명을 위한 동남권 연대’로 개편된 조직은 이전추진위 이규방 위원장 등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9월 8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10. 새마을 발상지 논란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 시발점이다.

해방 이후 가장 탁월한 사회정책으로 평가받는 이 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60년대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구해내고자 시행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도 여전히 농촌이 피폐한 현실에서 고안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청년층을 겨냥한 저임금 근로자를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흡수하는 이촌향도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농촌은 급격한 향촌사회의 붕괴, 노령화,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패배주의가 심각했다.

새마을운동이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시작이자 오히려 도시로 역유입 때 전국민적 정신운동의 상징이 된 만큼 그 첫 시작의 터전인 경상북도의 자긍심은 국가적 차원의 것일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저개발 국가들에게 공공마케팅 콘텐츠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가치로 인해 경북 도내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과연 어느 지자체인가를 놓고 문헌자료, 고증 연구용역 발주, 기념관 건립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공방이 이어졌다. 발상지의 위치를 선점한 청도군 신도리는 경상북도가 매개가 돼 지난 70년대 초부터 국내외 공무원과 민간단체, 외국 자치단체 등에서 시찰단이

파견되는 등 부동의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포항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되던 기계면 문성리 발상지설은 경북도의회 장세헌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2007년 2월 도정질 의에서 ‘원초적 발상지’임을 주장하고 경북도에 새마을기념관 건립 의향을 질문하면서 공식화됐다. 난감해진 경상북도는 당초 그해말로 예정된 경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를 발간하면서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팽팽한 공방의 와중에서 2009년 발간 시점은 연기는 물론 또 다른 파문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난감해진 청도군은 2007년 10월 한국자치정책연구원과 구미 경운대 산학협력단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고증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포항시도 그해 12월 (사)강원산업경영연구원에 유사한 용역을 의뢰해 이른바 ‘새마을 발상지 1라운드 논쟁’에 불을 당겼다.

2008년 3월 용역결과를 먼저 발표한 청도군은 유력한 자료라며 1975년 대통령비서실에서 발간한 화보집 ‘새마을’을 제시했다.

화보집에는 새마을운동을 처음 제창한 1970년 4월 22일 박 대통령이 지방장관회의에서 “지붕개량이 잘 되고, 마을 주변과 안길 등을 잘 가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1동을 본보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과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자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수록돼 있었다. 청도군은 특히 1970년도는 대동기로서 청도읍 신도마을이 예이며, 71년도는 실험사업기로서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를 성공마을로 규정했다. 또 김정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1990년에 저술한 《한국경제정책 30년사》와 경북마을지 등의 사료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최종용역 결과를 발표한 포항시 측은 1973년 당시 내무부가 부제 ‘시작에서 오늘까지’를 붙여 발간한 《새마을운동》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포항시는 ‘발상’(發祥)은 ‘역사 상 큰 의의를 가질 만한 일이 처음으로 나타남’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원칙임을 전제하고 박 대통령의 1971년 9월 17일 ‘전국 시장군수 비교행정 현지회의 유시문’에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고 지시’했음을 제시했다. 또 《새마을운동》에는 문성리와 달리 청도군, 특히 ‘신도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으며 1971년 7월 30일 새마을 관련 최초의 표창과 훈장(김두락 면장)이 청도가 아닌 문성리에 주어진 점도 발상지의 근거라고 제시했다.

2007년 하반기 연구용역 선점에 나선 두 지자체의 기념관 건립 각축도 청도군이 주도했다. 청도군은 앞서 2006년 7월 국·도비, 군비 등 사업비 57억원을 들여 청도읍 신도리에 지상 2층 규모의 새마을기념관 건립에 착수해 2009년 4월 완공했다. 포항시는 2008년 9월 17일 문성리에 국·도비, 시비 42억원을 투입해 기념관을 착공했다. 일부 언론이 ‘제2 라운드’로 명명한 기념관 건립 경쟁을 계기로 혈세 낭비 및 지자체 갈등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경북도 등의 중재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과

는 판판이었다.

경북도가 청도군 신도1리의 새마을기념관 준공식 일정에 맞춰 발상지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경북도는 2009년 4월 9일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연구용역을 한 결과 청도군 신도1리가 발상지이며, 기계면 문성리는 모범마을이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언론의 확인 결과 경북도는 당초 4월 30일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보고 받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일 《경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편찬위에 보고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됐다. 말썽이 일자 경북도는 “경북도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기관의 보도자료를 지자체가 대리 배포할 경우 양식은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현실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는 반박만 초래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새마을회는 경북도가 14일 열리는 청도 새마을기념관 준공식에 맞춰 새마을 발상지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특히 준공식 초청대상자들의 참석 여부 최종 통보기일이 9일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장세헌 경북도의원도 연구용역을 맡은 구미 경운대가 2006년부터 경북도로부터 새마을 관련 보조금을 받아 새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해왔으며 2007년에는 청도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발상지를 고증했음에도 발간위원회가 용역 의뢰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경위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기계면이 지역구인 이상범 포항시의원은 항의표시로 4월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08년 12월 지자체 간 새마을발상지 갈등이 우려되자 발상지란 단어 사용을 하지 않고 문성리를 시범마을로, 신도1리를 모범마을로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경북도가 새삼 발상지 논쟁을 부추겼다고 반박했다.

포항시 새마을지도자회는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고증 결과가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지역 간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새마을운동 발상지 고증은 개인의 주관에 개입된 자료나 그동안 막연히 불려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몇몇 위원들의 밀실행정에 의해 37년의 역사를 단정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용역 진행 및 발표과정의 공개를 촉구했다.

4월 15일 오후 경북도의회 장세헌·장경식 의원과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주민 등 240여 명은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도청에 도착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발상지 새벽종이 엉뚱한 데서 울린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하신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

회를 여는 한편 일부는 구미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다. 또 집회현장에서 이상범 포항시의원, 박용해 기계면새마을협의회장, 홍성운 새마을지도자 등 3명이 삭발을 했다. 이어 두 도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이삼걸 행정부지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용역 결과가 납품도 되지 않고 용역결과 보고회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부지사는 용역기관이 새마을운동 37년사 편찬위에 보고한 내용을 단순히 경북도가 발표 대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가 두 장의원의 항의에 결국 문제를 시인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직접 나와 용역 발표 과정이 잘못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새마을 발상지 규명에 대해 문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 경북도의 '청도군 신도1리 새마을 발상지' 발표와 14일 김관용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개최된 새마을기념관 준공식 등 일련의 파문은 기계면 문성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일단락됐다.

이 같은 경북도의 사태 수습에도 불구하고 발상지 논란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포항시새마을회와 이상범 포항시의원,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수훈자 홍선표 씨 등 4개 기관 및 개인은 15일 오후 경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예훼손금지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는 4월9일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가 경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편찬위에 보고한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군 신도1리'라는 부분을 경북도가 전시·배포·공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7일 포항시새마을회 등 관련 4개 단체대표와 새마을 수훈자들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경북도의 설명을 다시 들었다. 이들은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의 연구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관에 의뢰해 객관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지사는 경운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은 행정착오였다고 밝힌 뒤 경운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정부공식기록물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4월20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쟁점은 경북도의 용역결과 발표 파문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몰렸다. 찬반양론이 거듭된 결과 의원들은 이상범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 발상지 용역결과 불인정 성명서를 당장 채택하기에 앞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포항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다는 데 합의했다. 시의회는 21일 오후 긴급 전체의원간담회에 이어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상범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착공해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인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은 9월 17일 기계면 문성리에서 개관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관 행사에 참석한 김관용 도지사에게 그동안 묵혀온 감정을 강한 항의로 드러냄으로써 잡음을 빚기도 했다.

11. 포항시 상징 조형물 건립 논란

박승호 포항시장이 민선4기 시정의 한축으로 세운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는 2009년의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맞물리면서 도시 상징물을 잇달아 건립했다.

3월에는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진입로 입구에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형상화한 ‘은빛풍어’가, 6월에는 남구 해도동에 새로 단장한 시민근린공원에 ‘세계를 향한 비상’이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포항시는 2008년 10월 조형물 설치를 결정하고 전국공모를 거쳐 공모의 꼬리를 상징화한 형상의 조형물 ‘은빛풍어’를 선정, 3억원의 예산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세라믹타일 등의 소재로 제작해 2009년 4월 1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들어 막바지에 이른 공사로 조형물의 모습이 드러나자 언론과 주민들은 미적 결함, 설치 지역인 동해면과 맞지 않는 조형물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반발 여론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해면 청년단체는 포항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은 결과 연오랑 세오녀의 발상지에 공모인지 고래꼬리인지 명확치 않은 조형물이 등장했으며 오히려 과메기 집산지인 구룡포가 설치 장소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동해면과 구룡포·대보면이 과메기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입구임을 알리기 위해 공모꼬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실행행사에 나선 청년회원들은 준공식 당일 행사장을 점거해 결국 무산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근처 곳곳에 포항시를 성토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의 설치 취지에 동감한 자생단체들이 청년회를 설득하다 여의치 않자 주민 간 갈등 양상이 빚어졌으며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가 당초 동해면사무소에 공문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해 통보해 줄 것을 미리 요청했지만 묵살됐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은빛풍어’는 포항시의 거둬들인 청년단체 설득에 따라 공식행사는 갖지 못했지만 공개돼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다수결 투표로 선정작이 결정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앞서 건립된 ‘일출’도 ‘은빛풍어’와 마찬가지로 조형물의 미적 완성도와 자재 선택의 적합성, 도시

정체성 충실 여부 등이 꾸준한 논란을 초래한 사례에 속한다.

박승호 시장의 민선 4기 출범 이후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의 첫 상징물 건립 사업인 이 조형물은 북구 항구동에 새로 조성된 9호 광장에 2억원을 들여 2008년 설치됐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과 화강암을 이용한 꿈치와 오징어 형상의 조형물이 포항을 상징하는 소재를 이용해 특산물을 강조했다라는 포항시의 설명과 달리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성격을 배제한 데다 산만하고 예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항의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이들 조형물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세계를 향한 비상’은 작품의 완성도와 도시 정체성 부실 논란에다 공사 발주 과정의 참여 업체 간 갈등이 겹쳐진 경우이다.

포항시는 8명의 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인 담당과장을 제외하면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의 돛 형상과 일월신화를 통해 글로벌 포항의 비상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취지의 조형물을 선정했다.

건립 위치 변경, 추가 공사 등 짧은 공기에 시달린 ‘세계를 향한 비상’은 2009년 6월 12일 남구 해도근린공원에서 열린 ‘2009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막됐다. 하지만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조형물은 7월 10일 22개 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포항시를 항의 방문해 원청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미지급 피해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이 상징물도 예산 규모에 비해 ‘세계를 향한 비상’을 지향하는 포항의 정체성을 과연 제대로 반영하는지와 성적 연상 유발,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은 채 노출시킨 내부의 녹슨 철구조물이 철강도시 포항을 상징한다는 당초 의도 보다는 부실 시공 논란만 초래한 채 해도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다.

제2절 포항 성장엔진과 미래비전

1. 글로벌 첨단경제과학도시를 향한 도전

현재 포항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조성된 기존 규모보다 큰 신(新)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산업단지들은 포항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국제물류 중심의 영일만항 건설과 광역도시를 향한 SOC 구축 등 포항에는 글로벌 첨단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들이 한창 구축되고 있다.

1) 최단기간 최대 규모 기업투자 유치

(1) 외국자본 투자유치

- 유치활동 : 11회(미국, 두바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 해외기업 초청상담 : 16회, 270명
- 투자무역설명회 개최 : 2회 165개 업체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5회 38개 업체

(2) 국내기업 투자유치 : 194건 846억원

- 투자자 초청 상담 : 4회, 120명
- 투자무역 설명회 : 1회, 23개 업체
- 공장등록 : 194건, 846억원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노사정 산업평화선포식
- 영구 노사평화 선언 : 57개사 참여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기업민원종합심의회 운영
- POSCO주식 갖기 등 우리지역 기업사랑 운동 전개
- 123기업사랑지원단 운영 : 439명, 870개 업체

2)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1) 기록적인 대규모 단지

-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 280만㎡(88만평)
-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860만㎡(260만평)
- 경제자유구역 370만㎡(113만평)
- 국가산업단지 990만㎡(300만평)
- 해상신도시 등

(2) 영일만항 개항에 대비한 물동량 확보

-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 목표 2만 3천 750TEU/확보 6천 8TEU(2009년 12월 기준)
- 환동해 거점도시 회원도시 가입
- 영일만항 건설(2011) : 15선석(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개항,
1조5천217억원, 연간처리능력 : 1,200만톤(24만TEU)

(3) 영일만항 산업단지 조성

-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 5,784,282㎡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 2008년 10월
-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09년 12월
-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09년 12월
-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3,630,000㎡
- 용한 2지구 도시개발산업 : 2008년 9월

3)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1) 포항의 여건과 잠재력

포항시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포스텍과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종합연구소인 포항 산업과학연구원(RIST), 그리고 세계 5번째로 건립된 방사광가속기와 국제과학 협력기구인 아·태 물리이론센터 등 75곳의 우수한 첨단과학인프라가 집적된 과학기술도시이다. 특히 지곡단지 5.95km²(180만평)에는 연구인력 4,261명(박사 2,171명 포함)이 활동 중이다.

또 포항은 전국 신소재의 21%, 철강소재의 38.9% 이상이 집적되어 있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항중심의 신소재 산업이 선정되는 등 소재중심의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5대 첨단소재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첨단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포항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하여 철강 신소재,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에너지 소재, 그리고 지능로봇 산업 등 5대 첨단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3) 주요 추진과제

우선 포항의 우수한 과학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지역의 R&D 혁신역량을 강화해 지곡단지(5.95km² 규모)를 과학기술의 메카인 ‘R&D Complex’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1,129억원 /2004~2009), 포항지능로봇연구원 건립(392억원, 2004~2010),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1,000억원, 2009~2011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4,000억원, 2009~2012년)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의 유치를 추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45억원, 2004~2009

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2개사업, 310억원, 4년간), 풍력대학원 건립 사업(63억원, 2007~2012년)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화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구축된 과학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한 우수기술을 포항테크노파크 내에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2009년 5월 준공한 Steel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와 2010년 7월 준공 예정인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등 첨단과학 인프라를 하나씩 확충해 나감으로써,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및 지식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국내외 우수기업 및 국제연구소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간주도 자립형인 포항테크노파크는 47개 입주기업(종업원 503명)이 2008년 매출 1,390억원을 달성했다.

포항의 로봇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월드로봇올림픽아드(WRO)대회와 로봇 문화행사(13억원)를 추진했으며, 과학대중화를 위한 읍면동생활과학교실 운영, 과학짜잔치 행사,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과학투어, 포항가족과학축제,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의 과학마인드를 함양했다.

(4) 주요 추진성과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포스텍은 국내·외 특허출원 2천355건, 기술이전 151건의 연구성과(기술료 2,110억원)를 올려 학교기업 1호로 'NSB 포스텍'을 설립했으며 제노마인, 푸드사이언스, 뉴로넥스 등 다수의 대학 벤처기업을 배출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국·내외 특허·출원 1만2천876건, 기술이전 183건(기술료 5,322억원)의 연구 성과를 올리고 POSCO 중심의 핵심 철강기술을 개발하면서 마그네슘 및 니켈소재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등을 개발해왔다.

생명공학연구센터는 지난 5년 동안 특허출원 110여건, 벤처기업 창업 4개사, 기술이전 3건의 연구 성과를 냈다.

3대 중점 연구분야를 분자의약, 식물바이오텍, 나노바이오텍으로 정하고 DNA백신, C형 간염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고기능성 벼 품종개발, 바이오칩 표면처리기술, 전기화학전 유전자 센서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정책에 발맞춰 주요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해 막스플랑크 연구소 한국분원 설립,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소재중심도시 포항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부품·소재공단 조성 및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 핵심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적극 나서왔다.

(5) **철강산업의 고도화 추진**

- Steel표면 가공통합기술 지원센터 법인설립 : 2007. 8. 30
- 제일테크노스 부설연구소 개소, 포스텍 업무협약 체결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건립 : 2008. 5. 6 기공
- 동국철강(주) 중앙기술연구소 착공 : 2008. 1. 28
-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립(2010 완공) : 1조 4천억원

2. 글로벌 생태환경도시를 향한 노력

1) 'Art Polis 포항' 프로젝트 추진

(1) TPP(Terra nova Pohang Project)추진

- TPP T/F팀(4명), 추진위원회 (3명) 구성 : 2007. 2. 2
-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문 : 91건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 15건

(2) 창조적 도시공간 디자인

- 2007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선정 : 2007. 5
- 도시야경 조성 : 동빈 큰다리·신형산교 경관조명 설치

(3) 동빈내항 복원 등 '포항 오션르네상스' 추진

- 동빈내항복원 : L=1.3km, (2011)
- 동빈부두정비(1.29km) : 기본계획 및 설시설계 용역 완료,
-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 : 1.7km,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 (2010)

(4) 형산강물을 이용한 도로청소 및 도심공기 정화

- Clean Road System 설치 : 육거리-오거리간(830m)

(5) 도심녹화 및 생태공원 조성

- 담장 허물기 및 도심옥상 녹화 : 18곳(23,084㎡)
- 소규모 찻지공원 조성 : 9곳(8,537㎡),
- 중명자연생태공원 조성(98.9ha)
- 학교 숲 가꾸기 산업(2006~2010) : 46개교 46,000㎡

2) 쾌적한 도시환경 및 여가생활 인프라 조성

(1) 도시 생활환경 개선

- 하수처리시설 확충 :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증설) 등 4곳
- 하수관거 정비 사업 : 두호·학산 45km, 흥해64km
-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7개 지구 등

(2) 대기질 향상과 깨끗한 물 공급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 62대(시내버스, 전세버스, 청소차)
- 포항공단자율환경실천협의회 운영 : 53개 업체 참여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 2007. 6

(3)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확충

- 자전거도로 개설(14.7km) : 효자동-송도-여남
- 형산강 수변공원 조성(11.2km) : 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 및 환호공원 야외무대 설치

3.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향한 신념

1) 문화예술도시 인프라 확충

(1)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포항미술관 건립(2009) : 4,129㎡
-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 : 2008~2010
- 소형 다목적 컨벤션센터(회의실, 전시실, 공연장 등)

(2) 새천년기념관 건립(2008~2009)

(3) 중앙상가 실개천(657m) 및 문화거리 조성

- 문화행사 개최 : 80여회 50,000명
- 외국 및 타기관 방문 벤치마킹 : 17개 기관 1,000명

(4) 도서관 시설 확충

- 포은도서관 개관 : 2007. 5. 7, 좌석900석, 장서 6만4천81권
- 도서모으기운동 전개 : 1만8천57권, 기증금액 4천200만원

- 동해공공도서관 건립 : 2008 준공
- 작은도서관 확충 : 8곳

(5) 포항의 정신문화 계승

- 문화도시 포항자문위원회와 포항정신문화자문위원회 구축
- 해월 최시형 선생 유허지, 포은 정몽주 학술 용역

2) 해양관광·레포츠도시 조성

(1) 해안선 관광벨트

포항은 호미곶을 중심으로 110km의 수려한 해안절경과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내연산 보경사, 경상북도수목원, 운제산 오어사, 비학산 법광사, 영일 장기읍성, 하옥계곡 등 많은 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포항시는 월포와 북부해수욕장에 집중투자하고 모감주나무군락지, 주상절리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100곳에 문화관광자원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다.

(2) 농어촌 체험관광 개발

죽장면 일대 가사천 지구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 농업기술센터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농가숙식체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스킨스쿠버와 윈드서핑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구룡포 다무포에 고래생태마을을 조성해 해양과 산림을 연결하는 종합적 생태마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수족관 사업을 위해 호미곶 관광지 조성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해저터널식 시설을 건립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3) 첨단과학 산업관광 활성화

포스코와 포항공대, 포항테크노파크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활용해 호미곶관광지를 비롯한 곳곳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해 수학여행단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과 역사탐방, 산림휴양, 농어촌체험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문헌